광주·전남 4대 현안 이렇게 풀자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약속했던 이명박 정부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광주·전남 지역 대형 현안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 조기완공 대선공약이 물거품이 된데 이어 국책사업인 '5+2 광역경제권' 사업에서도 호남소외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광주·전남의 주요 현안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1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대선 공약 … 대통령이 나서야

전구간 동시 공사땐 고용 창출 등 경제난 해소

공법 등 감안 늦어도 2014년까지는 완공해야

호남고속철도의 2012년 조기 완공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호남고속철도의 2012년 조기 완공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을 위한 기본 계획 수정안을 놓고 청와대와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당장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2016년),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2015년),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2014년)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시기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는 호남고속철도의 2012년 조기 완공은 사실상 어렵고 기본계획(2017년)에서 1~2년 단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관측을 낳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호남 민심은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호남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내세운 대선 공약인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책 사업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의지만 확고하다면 조기 완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호남 민심은 호남고속철도가 기본 계획에서 1~2년 정도 단축되는데 그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는 물론 J프로젝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혁신·기업도시 조성 등 굵직굵직한 호남 현안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호남고속철도 완공이 늦어질수록 호남 발전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민심은 호남고속철도의 2012년 조기 완공 공약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하지만 재정, 공법, 환경 문제 등을 감안해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2014년까지는 완공돼야 한다는 기류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은 경제 회복을 위한 '속도전'을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조기 완공을 위해서는 전 구간 동시 공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 등 현재의 경제 난국을 풀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은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호남발전에 대한 여권의 진정성을 확인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면서 동서화합 등 국론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이 물 건너 간거나 1년 정도 앞당겨지는데 그친다면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수도권 규제완화와 영남권 위주의 5+2 광역경제권 계획 등과 맞물리면서 호남 민심은 크게 동요할 전망이다.

특히, 이는 이명박 정부의 '호남 홀대론'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고속철도는 단순한 SOC 건설을 넘어 호남을 상징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조기 완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호남 민심의 반발 등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점을 고려,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2012년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2016년으로 미뤄지는 등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사진은 장성 일대 호남선 구간 〈광주일보 자료사진〉

호남고속철도 추진일지

- ▲1987년=민정당 노태우 대통령 후보 공약
- ▲1993년 8월=호남고속철도 건설계획 발표
- ▲2006년 8월=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안 확정
- ▲2007년=이명박 대통령 후보 2012년 완공 공약
- ▲2007년 11월=호남고속철도 기본설계 완료

2 5+2 광역경제권 수정

"6+2 안되면 확실한 대안을"

호남 1개·영남 2개 편성은 국토 균형발전 외면

R&D특구·자동차 클러스터·의료단지 지원을

'호남 소외'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광주·전남 지역민의 반발을 샀던 '5+2 광역경제권' 구축 사업이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권역 재조정'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던 광주시가 한 발짝 물러나 정부와 타협점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5+2 광역경제권'의 권역 재조정 목소리는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호남에 1개 권역, 영남에는 2개 권역을 편성한 '5+2 경제권 사업'이 호남권의 소외를 가중시키고 영·호남 간 산업 격차를 더욱 심화하는 국토 균형발전 외면 정책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수십년간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온 호남권이 이명박 정부에서 또 다시 소외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 정치권 및 시·도민들은 권역 재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특단의 보완책을 약속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호남권 광역자치단체는 최근 그동안 주장해 온 '6+2'·'5+3'으로 권역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권역 재조정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광역권과 호남권과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 등의 추가 사업을 얻어내기 위해 정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먼저 광주시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크게 R&D특구 지정·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광역철도망 건설 등 3가지다.

R&D특구의 경우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으로 정부의 '5+2광역경제권'을 보완하는 초광역권 계획의 추진 검토대상인데다, 호남권 발전전략과 융합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국토 서남권 경제 발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은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디젤부품산업과 연계가 가능한데다 고감성·고경량화 소재개발 기반 구축을 비롯한 친환경 휴먼친화 소재 핵심기술개발, 호남광역권 자동차클러스터구축 및 핵심연계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SOC 프로젝트로 포함된 광주 제3순환도로 건설대신 광주~나주 공동혁신도시와 광주~화순을 연결하는 광주 광역철도망 건설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주시와 함께 공동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건설도 추가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건의를 모두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광주·전남을 묶어 새로운 광역 경제권을 조성하면 국토 균형발전 효과와 함께 대 중국, 동남아, 인도권을 향한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민들은 실물경제를 충분하게 경험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뛰어난 이명박 대통령이 이 같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절박한 요구를 받아들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5+2 광역경제권 구상

'5+2' 광역경제권 추진일지

- ▲2008년 1월=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광역경제권' 구상 발표
- ▲2008년 7월=정부·한나라당 당정협의회에서 논의
- ▲2008년 9월=광역경제권 발전 선도 30대 프로젝트 선정
- ▲2008년 10월=선도사업 계획서 마감
- ▲2008년 12월=광역경제권 핵심 선도산업 확정 발표